

한국의 민주화와 민족주의 이념의 정치(1945~1987)*

하상복**

- I. 들어가는 말
- II. 민족과 민족주의의 한국적 의미
- III.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민족주의
- IV. 민주화의 좌절과 민족주의 이념의 정치(1960-1980)
- V. 민주화의 도래와 민족주의 이념의 정치(1981-1987)
- VI. 나오는 말

본 논문은 민주화로 요약되는 해방 이후부터 1987년까지의 한국의 정치시기를 민족주의 이념의 전개과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 민주화와 민족주의 이념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의 문제의식은 근본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경쟁선거)의 정착이라는 제도적 외형의 관점에서만 한국의 민주화를 분석하는 기존의 시각에 대한 비판에 바탕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볼 때 민족주의 이념은 다른 이념과는 달리 지배세력과 저항세력 모두의 정치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정해온 핵심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민족과 민족주의 이념은 외형상 내용적 상이성을 보이면서도 혈연, 역사, 문화적 요소에 기초한 민족과 민족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민주화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정에 깊이 연루된 이념이라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주제어: 민주화, 민족, 민족주의, 민족국가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3-074-BM0005).

** 목포대학교 정치미디어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197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정치의 가장 주목할만한 현상들 중의 하나는 남유럽, 남미, 아시아 및 동유럽 제국들이 민주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팅턴은 이러한 현상을 “제3의 물결”로 명명했다(Huntington 1991, 13-26). 이러한 민주화 물결의 근본적 특징은 ‘탈권위주의 민주화’(O'Donnell, Schmitter and Whitehead 1986)라는 데 있다. 탈권위주의 민주화의 공통 지표는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유린되어 왔던 공정한 선거제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말하자면 최소민주주의 규칙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다.

한국의 경우 1987년을 민주화의 기점으로 삼는 이유 역시 그 점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임혁백 1994, 289; 1997, 22). 해방 이래 한국 사회는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 형성을 위한 세 번의 계기를 맞는다. 1960년 4·19 혁명 및 그 귀결로서 민주당 정권의 등장과 1979년 10·26 사건으로 도래한 이른바 서울의 봄이 첫째와 둘째 계기라고 한다면, 1987년 6월 시민항쟁을 통해 마련된 일련의 민주화 일정, 즉 헌법 개정 협상, 6공화국 헌법 제정 및 경쟁 선거가 그 세 번째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군부 쿠데타에 의해 민주주의 제도(선거)의 안정적 정착을 실현하지 못한 앞의 두 계기와는 달리 셋째 계기는 노태우정권-김영삼 정권-김대중 정권-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정권교체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권력의 ‘민주적 재생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민주화는 적어도 제도적 외형의 차원에서는 여타의 경우들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모습을 띠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한국의 민주화 역시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과 그것의 결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규칙을 마련한 경우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화과정을 일반화된 틀로 묶는 이러한 시각은 무

엇보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의 역사적·이념적 특수성을 보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민주화과정과 결합해 분석하지 않는 문제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민주화를 둘러싼 정치적 행위자들의 현상적 움직임과 최소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외형의 구축 양상에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외형적 차원을 넘어 민주화과정을 둘러싼 역사적·과정적·이념적 차원에 주목하면 한국의 민주화과정의 상이성과 고유성이 발견될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본 논문은 해방 이후 근대국가 수립과정으로부터 초래된 구조적 모순성과 이념적 고유성을 발견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민주화과정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했는가를 고찰하면서 한국 민주화의 고유성을 밝히고자 한다.

반제국주의 투쟁과 연합국 세력의 전쟁 승리를 통해 확보된 해방공간 위에서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들의 이념적 상이성이 미·소 양국의 대립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과정은 그야말로 굴곡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이는 결국 ‘미완의 민족국가’, ‘실패한 국민국가’로 규정될 수 있는 한국의 근대국가로 귀결된다. 이승만의 제1공화국으로부터 시작된 근대국가의 이러한 ‘이중 모순’은 군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한층 더 악화되기에 이른다. 모순의 이중성은 필연적으로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과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이중 운동’을 배태한다. 이 점에서 한국의 반정부 운동은 다른 나라들과 상이한 양상을 띤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반정부 운동의 본질적 지향이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형식적으로만 남아있었던, 국민국가의 민주주의 제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었던 반면 한국은 국민국가의 제도적 차원의 과제와 함께 분단국가 청산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한국의 반정부운동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의 양상을 띠었고 이런 점에서 그

것을 ‘민주화 운동’으로 부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 평가하자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민족국가와 국민국가의 완성을 궁극적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당면의 과제로서 권위주의 정권의 타도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 근대국가의 이중 모순을 온존·강화시키는 주체가 바로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 민주화 운동의 특수성들 중의 하나라면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민주화 운동의 이념 차원이다. 민주화 과정에는 다양한 이념들과 언어들이 등장하는데 권위주의 세력이든 저항세력이든 양쪽 모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민주주의 이념과 언어를 구사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정당화를 위한 최고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이념과 함께 민족주의가 민주화 과정에서 상당한 이념적 규정력—정도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을 행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정치에서 ‘반민족적’이라는 규정은 ‘반민주적’이라는 규정만큼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필자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 민주화의 원년으로 지칭되는 1987년까지를 민주화의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이념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는 먼저 2장을 통해 한국 민주화를 둘러싼 민족주의 이념의 대립 양상을 보기 위한 전제적 논의로서 민족의 한국적 의미를 고찰할 것이며 3장에서는 식민 지배를 경험한 신생국가들에서 발견되는 민족주의, 즉 근대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념과 운동의 양식을 고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근대국가 수립의 한국적 길을 밝히고자 한다. 4장과 5장에서는 민주화 과정과 민족주의 이념의 움직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화를 둘러싼 각 정치세력들의 민족주의 담론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II. 민족과 민족주의의 한국적 의미

『종족민족주의』(Ethnonationalism)의 저자, 코너(Walker Conner)는 민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민족이란 “동일한 혈통적 기원을 갖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바로 그 혈통적 유대에 근거해 구성원들의 충성심을 강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집단이다. 따라서 민족은 최고도로 확장된 가족 공동체인 것이다”(Norman 1999, 54). 이는 종족적(ethnic) 기원의 객관적 구성요소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젤너와 앤더슨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논리를 전개한다. 이들이 말하는 민족은 종족적 실체로서의 민족이 아니라 근대 세계의 정치적 구성물로서의 국민을 의미하는 민족이다(Smith 2000, 2-8). 여기서는 민족성과 종족성간의 필연적 관계가 해체되게 된다. 젤너에 따르면 민족은 근대 세계의 사회경제적 필요, 즉 토지의 구속을 벗어나 공간적 이동성을 확보한 이질적 대중들을 동질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이념이다. 따라서 민족은 문화적·실체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이념적 개념이다. 앤더슨 역시 민족을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 공동체”로 정의하면서(앤더슨 2002, 25) 젤너와 같은 입장에 선다. 하지만 민족을 근대적 사회체제 구축을 위한 이념적 도구로 파악하면서 ‘유물론적’ 시각에서 서 있는 젤너(Ben-Israel 1992, 371)와는 달리 앤더슨은 민족의 심리적·정서적 측면을 강조한다. 즉, “상상의 발명품에 대해 느끼는 애착심”(앤더슨 2002, 183)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위(부르주아)에서 부과되는 이념으로서의 민족을 넘어 민족의식과 정체성 형성을 가능케 하는 심리 메커니즘에 주목한다. 이들의 시각은 흄스봄이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에서 주장한 “민족이 국가와 민족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국가가 민족을 만드는 것이지 민족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1880년 이후 평범한 남녀가 민족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점차 문제가 되었다”

(홉스봄 1994, 26; 67)라는 두 명제 속에서 재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르낭(E. Renan)과 헤르더의 대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원초론 대 도구론’, ‘문화적 공동체 대 정치적 공동체’(노태구 2002, 28-34), ‘객관주의 대 주관주의’(임지현 1999, 21-22)의 이분법으로 표출되는, 민족 개념의 이러한 상이성 속에서 한국적 의미의 민족은 어떠한 위치를 점유하는가? 북한의 용천 가스열차 사고에 대한 지난 4월 29일 <동아일보> 1면 기사의 제목은 “우린 한 핏줄…北 눈물 닦아주자”였다. 이는 한국에서 민족이 어떠한 규정성을 띠고 있는가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적 의미의 민족은 본질적으로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인 동포와 “한 조상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들”인 겨레와 혼용되어도 무방한 개념으로 이해된다(윤해동 2000, 51). 한국의 정치 담론에서 민족, 동포, 겨레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가를 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래의 대통령 담론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한국적 의미의 민족은 이념적 구성물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조상, 역사, 문화, 언어, 공간을 공유하는 원초적·영속적 실체가 된다. 민족의 한국적 의미를 정치 담론의 몇몇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다음은 역대 대통령 담화문 속의 민족관이다.

4천여의 역사를 계속하며 우리의 신성한 조상들이 계계승승하야 내려오며 이 금수강산에서 살며 일하다가 필요한 때에는 다 일어나 싸워서 우리의 거룩한 유업을 물려주었고 또 앞으로 이 신성한 유업을 보유할 책임을 우리의 손에 끼쳐준 것입니다(이승만 대통령 2대 취임사).

친애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탄생한 지 얼마 안되는 신흥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수없이 많았던 외세의 침략을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격퇴한 역센 민족이며 인내와 끈기로 고난을 이겨낸 생명력과 창조력을 지닌 민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박정희 대통령 6대 취임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 민족은 이 땅 위에 반만년 면면히 역사를 영위하면서 외침 등 숭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독창적 문화를 꽃피워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시아 대륙의 숭한, 강대한 민족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였으며 수많은 민족이 이미 그 역사와 문화를 소멸하고 말았으나 우리 민족은 빛나는 문화전통과 동질성을 지키고 발전시켜 찬란한 동아시아 문화의 창조에 크게 공헌하여 왔습니다(전두환 대통령 12대 취임사).

원초성과 영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민족 개념은 정권 세력만이 아니라 저항 세력에도 해당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인 이상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 있다”(전 부산학생 호소문, 1960년 3월), “평화를 동경하던 백의민족”(고려대학교 제2차 4·18 시국선언문, 1962년 4월 19일), “온 겨레에 소생의 희망을 주는 단 하나의 길”(민중·신한 합당 선언문, 1967년 2월 7일), “갈라진 민족이 다시 평화로운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길”(민주국민현장, 1974년 12월 25일) 등과 같은 예는 저항 세력에게서도 한국적 의미의 민족이 같은 혈연, 같은 영토, 같은 역사와 전통을 보유한 사람들의 원초적 공동체로 이해됨을 말해준다. 따라서 혈연적·언어적·유기체적 공동체로 파악되는(윤해동 2000, 50-59) 한민족 공동체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상상된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기보다는 “실제의 공동체”(real community)라는 인식이 성립하는 것이다(박명림 1996, 61).

임지현은 한국의 근·현대 정치사에서 민족은 다른 어떤 언어들보다 크고 무거운 정치적 상징성을 내포한 언어이자 모든 정치세력들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원천적 언어였다고 한다(임지현 1999, 52-3).

20세기 한국 사회의 담론 체계에서 민족은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늘 그 중심 위치를 차지했다. 지난 100여 년간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전개된 삶과 죽음, 노동과 문화, 사상과 느낌은 물론 심지어 개인적 고통과 사랑까지도 민족의 거대한 담론체계 속에 흡인되었다…그것은

계급과 성, 지식의 유무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역사의 명령이었고 한국 사회의 규범이었다. 민족주의의 명분은 실로 누구도 뿌리칠 수 없는 역사적 힘이었다. 그 결과 좌파와 우파 또는 중도파를 막론하고 모두 자신들의 이념적 정당성을 민족주의에서 구하는 경향이 강했다.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의 사회적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민족적인 것 인가의 여부였다. 한반도에서 반민족적이라는 낙인은 곧 그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생명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었으므로 민족주의의 명분에 대한 집착은 그 만큼 결사적이었다(임지현 1999, 52).

임지현의 위의 논리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을 통해 정권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대통령 취임사들과 1968년 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은 정권의 정통성 및 정당성의 민족적 기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유당·공화당 등 여당의 창당 선언문을 보게 되면 “민족 협동적 사회건설”, “민족의 주체성”, “민족중흥의 대업”, “민족적 양심”, “민족의 요구”(김삼웅 1997, 215, 264-267)의 이름으로 창당을 정당화하는 담론의 논리가 전개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민족 담론의 논리는 반정부 세력들의 선언문이나 성명서들 속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1956년 11월의 진보당 창당 선언문을 보자.

그러면 이러한 국가적 중대위기를 극복하고 생사의 관두에 선 우리 민족의 운명을 크게 타개하는 기사회생의 방도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새로운 민주주의적 정치세력을 집결하는 것, 즉 진보적이며 혁신적인 민주주의적 대 정당을 새로이 결성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존망의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김삼웅 1997, 228).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회가 발표한, 박정희 정권의 삼선 개헌 반대

성명서(3선 개헌 저지투쟁의 대오를 향해, 1969년 9월 1일)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며 끝맺음되고 있다.

민족의 공동운명은 어느 일파나 어느 독재자의 마수로써도 분쇄될 수는 없었다…… 역사는 정의를 안다. 이 나라 헌정 질서에 더할 수 없이 암담하고 우울한 국면을 초래한 파시스트적 일당독재의 기도가 얼마나 헛되고 무모한 것인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 일인 독재적 장기집권과 우상화가 국가민족의 발전에 얼마나 저해되고 있는가는 세계도처에서 입증되고 있다. 3선 개헌의 부당성과 비역사성, 그것이 야기할 사회적 혼란과 국가안위의 위협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개헌저지군의 장거야말로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청경임을 단언한다. 이에 우리는 민족적 번영과 민주·자유사회의 건설을 위해 3선 개헌 저지투쟁의 대오를 늦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김삼웅 1984, 95-96).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통해 인식할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민족은 절대적 규범성과 가치를 내포하는 언어로 등장한다. 그것은 어느 특정 세력의 정치적 전유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의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적대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모든 세력들이 공유하는 언어다. 한국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러한 현상은 강력한 종족성에 기초한 민족의식의 기반이 아주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요인과 임지현이 말하고 있듯이 식민지, 불완전한 독립, 분단 등과 같은 정치적 충격파(임지현 1999, 53)에 의해 그 기반이 위협을 받았다는 정치·사회적 요인과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III.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민족주의

역사적으로 볼 때 민족과 민족주의는 상이한 경로와 이념적 성격을

보이면서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에서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이념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절대왕정의 구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인 공화제 수립의 동력으로 작용한 이념이자 운동력이었다. 민족주의 운동의 주체인 민족은 1789년에 제정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공표한 주권, 인권, 시민권의 담지자들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적 지향성을 갖는, 문화적 개념과 대비되는 ‘정치적’ 개념인 것이다(최갑수 1999, 114; 임지현 1999). 벤-이스라엘(H. Ben-Israel), 모틸(A. J. Motyl), 키인(J. Keane) 등의 민족주의 연구가들이 민족주의를 ‘계몽주의의 필연적 산물’ 또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이념적 결과물’로 파악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이념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근거한 것이다(Ben-Israel 1992, 377-381; Motyl 1992, 308-310; Keane 1994, 174).

그런데 1870년대 이후 민주주의적 내용을 갖는 민족주의의 의미가 약화되기 시작한다. 비스마르크에 의한 독일 통일과 부국강병책, 영국 디즈레일리 내각의 팽창정책, 프랑스 제3공화정의 식민 정책 등,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로 나아가면서 민족주의는 자유, 관용, 평등, 우애 등의 진보적 이념보다는 종족, 인종, 경쟁, 지배 등의 수구적 이념과 연결 되기에 이른다(헤이즈 1981, 98-102). ‘드레퓔스 사건’은 민족주의의 진보적 성격을 창출한 프랑스에서조차 그것이 점차 종족주의적·인종주의적 굴절을 겪게 됨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이해된다. 민족주의의 이러한 변용은 1930-40년대 전체주의 이념의 등장과 더불어 한층 더 광적인 양상을 띤다. 이제 민족주의는 국가의 논리와 힘을 추종하는 집단들의 정복 의지로 변형되면서 민주주의, 관용, 평등과 같은 이념들과 적대적 관계에 놓인다. 슐레진저(Arthur Schlesinger)와 시튼왓슨(Hugh Seton-Watson)이 민족주의의 억압적 성격을 지적하거나 아우슈비츠의 얼굴을 가진 동전에 비유하는 것은(Ben-Israel 1992, 367-369)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반성적 고찰의 결과인 것이다.

18~20세기를 통해 발흥하고 극성했던 유럽 민족주의의 물결은 20세기 초·중반에 접어들면서 피식민지 제 3 세계 사회로 확산된다. 이들의 민족주의는 제국주의 지배로부터의 해방과 그 기초 위에서 자신들의 주권국가를 형성하려는 폭발적 의지의 발현이다. 이러한 제3세계의 민족주의는 식민지의 역사적 구조, 사회 내부의 세력 관계, 민족 기반 등에 따라 각각 상이한 양상을 띤다. 그렇다면 탈식민지 한국의 민족주의는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민족과 민족주의의 원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근대국가 수립이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에 의해 굴절되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를 보자. 서구는 민족건설과 국가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는 근대국가 수립과정을 경험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근대국가의 주체인 민족을 정치적 원리에 의해서든 언어적·종족적 원리에 의해서든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아주 오래 전부터 강력한 종족적 정체성의 기반을 강하게 구축하고 있었고 그것이 민족 구성원의 실질적 기반이었다는 것이다. 한민족은 한반도에 거주하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체화하고 일제 식민 지배의 경험을 공유하는 실제로 ‘존재’ 하고 있었다. 그러한 민족적 바탕 위에서 적어도 고려 왕조 이래 깨지지 않고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던 ‘일민족 일국가’의 원리를 근대국가 수립과정에 적용하는 일이 한국 민족주의의 핵심적 부분이었던 것이다.¹⁾ 한국에서는 내셔널리즘이 국민주의나 국가주의보다 민족주의로 통용되고 있는 이유(최상용 1977, 25)와 한국의 국가를 “결손 국가” 또는 “미완의 민족국가”(임현진·공유식·김병국 1994, 487-511)로 규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

1) 한민족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의 합치 현상”을 보여 왔다는 것이다(박명림 1996, 60-61).

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근대국가 수립의 동력이 ‘내부’, 즉 부르주아의 힘으로부터 생성되었던 영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부르주아의 형성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이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붕괴되면서 근대화의 내적 동력이 소실되어 버렸다. 이는 결국 국민주권, 입헌주의, 공화주의와 같은 근대국가 형성의 이념들이 자발적 실천의 계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근대국가 건설의 의지는 해방 공간을 통해 다시 등장하지만 제국주의의 또 다른 강제력에 의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한다. 이러한 좌절과 왜곡은 궁극적으로 ‘미완의 민족국가’와 ‘실패한 국민국가’로 귀결되기에 이른다. 제도적 형식의 차원에서는 온전한 근대국가지만 내용상으로는 불완전한 근대국가의 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한국의 근대국가가 어떤 과정 속에서 불완전한 형태로 귀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로젠베르그(A. Rosenberg, 1990)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유럽 정치사』속에서 각각의 정치세력들이 추구한 정치이념들의 각축과 대립의 동학을 통해 유럽, 특히 프랑스의 근대 국민국가 형성·전개 과정을 분석한다. 근대국가 수립의 길과 성격을 둘러싼 해방 3년간의 정치 역시 첨예한 이념적 각축과 대결로 특징 지워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유럽, 특히 프랑스 근대국가 수립 과정상의 이념적 각축이 공화정이나 입헌군주정이나, 공화정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자유주의 공화정이나 사회주의 공화정이나를 둘러싼 정체 논쟁으로 나아간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민주주의 정체 성격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전의 모든 민족해방운동들과 그 성격들의 종합”(진덕규 2000, 362)으로서의 3·1 운동 이후 공화주의가 모든 세력들의 이념적 대의이자 지향이었다는 점에 주목(윤해동 2000, 48)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국의 공화주의 이념은, 프랑스에서처럼 절대

왕정을 타도할 이념으로서 적극적으로 창출된 것이 아니라, 왕정이 외부 세력에 의해 붕괴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이념이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최초의 구체적 비전은 ‘건국준비위원회’에 의한 인민공화국 ‘선언’(1945년 9월 6일)에서 제시된다. ‘조선 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알리는 이 선언은 국가 수립의 핵심적 목표로서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의 건설”, “일본제국주의와 봉건적 잔재세력의 일소”, “전 민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 제국의 일원으로서 상호 제휴”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 방침으로 자유민주주의 원리들(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의 자유와 보통 선거권, 인민 평등)과 함께 사회주의 원리들(산업시설의 국유화, 사회보장제, 의무교육제, 최저 생활의 보호, 실업구제책)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이기형 1984, 209-210). 하지만 ‘온건 사회주의적 민족주의’를 실천 이념으로 제시한 이 비전은 미군정에 의한 인공 불법화 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만다. 한편, 1945년 9월 11일 결성된,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 세력이 제시한 국가 성격은 — 9월 25일에 발표된 ‘8월 테제’(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에 기초할 때 — 사회주의로 설정된다. 이와 관련 ‘테제’는 해방정국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규정하고 당면 과제로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중운동, 노동자·농민 운동의 조직적 전개, 여타 사회 부문(청년, 여성, 문화, 소비자, 실업자)의 대중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나아가 프롤레타리아의 헤게모니 장악 투쟁을 강조한다(김남식 1987).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 우파세력의 근대국가 비전과 관련해 근대 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임시정부의 계획(1945년 8월 15일)을 참고로 하면 ‘복국’과 ‘건국’의 단계가 제시된다. 복국의 의미는 “한반도에서 식민지적 성격을 완전 해소하고 민족 정통성을 되찾는”

것이며 건국은 “삼균주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정치제도를 확립하여 온전한 주권독립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당면 절차로서 임시정부는 ‘서방 국가들과의 제휴와 협력’, ‘국내외 각 계층과 집단을 망라한 과도정부 수립’, ‘매국노의 처벌’ 등을 제시하는데(진덕규 2000, 367-368), 이는 여운형 중심의 중도 좌파 민족주의에 비해 온건하고 포괄적인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미군정청이 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입국을 개인 자격으로 제한함으로써(심지연 1986, 32) 임시정부의 위상과 기반의 약화가 초래되고 결국 민족주의 우파의 비전 역시 실천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해방정국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좌파세력들의 신속한 움직임을 우려한 국내의 보수주의 우파세력은 한국 민주당(1945년 9월 16일)의 결성과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통한 대응을 구사한다.

좌파 민족주의 세력, 사회주의 혁명 세력 및 우파 민족주의 세력들이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에 대한 뚜렷한 이념적 비전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이들 보수주의 우파세력들은 — 형식적으로는 민족주의를 표방했으면서도 — 그러한 비전을 갖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들에게는 그러한 비전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 민족주의 좌·우파 및 혁명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이 강고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일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미군정 및 이승만과의 결탁을 통한 기존 질서의 유지를 제 일의 목표로 설정하게 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새로운 근대국가 비전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미군정에 협력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진덕규 2000, 278-279).

“미·영·소·중 4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동시에 조선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장래 독립에 비할 터인 바 신탁통치기간은 최고 5년으로

한다”(심지연 1986, 41)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1945년 12월 27일)은 근대국가의 이념적 대립이 ‘통일국가의 수립이나 남한만의 국민국가의 수립이나’에 관한 논쟁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제 탁치를 “민족자결의 원칙에 어긋나고 민족적 자존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한민족의 노예화” 조치로 이해하는 반탁진영의 논리와 “탁치는 제국주의적 위임통치와는 다른, 자주독립 건설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는 찬탁진영의 논리가 극단적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국면이 조성된다. 정권 획득을 위해 이러한 분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정치인은 이승만이였다. 그는 김규식과 여운형의 좌우 합작운동의 발족(1946년 5월 25일)에 즈음해 발표된 이른바 “정읍발언”(1946년 6월 3일)을 통해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입니다”(김도현 1980, 316)라는 논리를 통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의지를 처음으로 언명한다. 미·소 갈등의 격화는 이승만으로 하여금 단정 수립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한다. 1947년에 재개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실패로 귀결되는 상황이 그것이다. 소련은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한국의 정치세력에게 이관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유엔으로 이관 — 유엔 감시 하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 할 것을 고집한다. 결국 남북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자 이승만은 남한의 단독 선거를 확신하면서 단정 수립 운동을 강화해 나간다. 이승만은, 단선이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통일 민족국가 수립의 최후의 시도로서 남북협상을 추진하고자한 김구와 김규식을 상대로 “남한에서의 강력한 정부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안전판으로서 필요”하며 “북한 주민의 35%가 월남해 온 만큼 남한에서의 정부가 전국적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갖는다”는 논

리를 통해 단정의 정당성을 역설한다(김학준 1980, 92). 결국 단정을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이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1948년 5월 10일 남한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제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5월 31일 개원한 제헌의회는 이승만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제도적 형식’의 기준에서 볼 때 제1공화국은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국가는 국민주권, 보통선거, 의회제, 대외적 주권체 등 근대 국민국가의 제도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 통일과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에는 결코 온전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 공화국이다. 먼저, 통일 민족국가(일민족 일국가)의 구현을 민족사의 과업으로 설정하는 시각(서중석 1991, 16)에서 볼 때 제1공화국은 미완의 민족국가이자 결손 국가로 규정된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영토로 하고 전 민족의 통합 국가가 수립될 때만이 온전한 민족국가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1공화국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형식과 실질적 내용 사이에서 깊은 괴리현상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러한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이승만 정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군부 권위주의 정권들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한국 근대국가의 이러한 중첩 모순은 저항세력의 반정부 운동이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도록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제부터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반정부 운동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되는 지를 고찰하기로 하자.

IV. 민주화의 좌절과 민족주의 이념의 정치(1960~1980)

본 장에서는 각각 1960년 4월과 1979년 10월, 즉 권위주의 정권들의 위기와 해체를 통해 실현된 민주화 계기를 중심으로 민족주의가 어떠한 담론의 양상을 띠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승만 정권의 위기 발생은 직접적으로 3·15 부정선거와 그에 대한 시민적 저항, 저항의 물리적 봉쇄, 저항의 가속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집권 초기부터 말기까지 계속된 폭력성과 권위주의적 통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의 폭력성과 권위주의는 미군 철수, 남북 협상, 반민족 행위자 처벌, 국가보안법 입법 철회, 정부 무능 등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뒤흔든, 제헌의회선거에서 85석을 얻은 ‘소장과 그룹’에 대한 탄압에서 시작된다. ‘국회 프락치 사건’(1949년 5월-6월)과 ‘6·6 사건’(1949년)을 통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1948년 9월 22일)에 근거해 구성된 반민특위를 해체한 일이 그것이다. 그리고 민국당이 대통령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1950년 1월 27일 내각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의회 내 반정부 세력의 형성이 가시화되자 이승만은 그것이 대통령 권력의 재생산에 위협 요인이라는 인식 아래 1952년 7월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력을 동원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이는 정권의 폭력성과 권위주의적 성격을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 하겠다(한배호 1993, 31-32). 헌정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근본적 부정을 표출한 ‘부산정치파동’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954년 7월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으로 재현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대통령 선거 입후보를 1회로 제한한 헌법조항의 삭제를 목표로 한 개헌이었다. 그 밖에 이승만 정권은 1948년에 공포된 국가보안법을 자유당 의원들만의 참여로 개정(1958년 11월)하면서 의회민주주의의 제도적 근간을 뿌리 채 뽑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국가보안법을 통해 1958년 진보당의 조봉암을 처형하고 반정

부 언론을 탄압하는 등 폭력성과 비민주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부정은 물리력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헌정 질서와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끊임없이 유린했던 정권의 권위주의에 대한 사회적 불만 폭발의 촉매였다.

이승만 권위주의 정권의 유지는 물리적·제도적 폭력에만 의존한 것은 아니었다.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결함을 은폐하고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을 합리화하며 궁극적으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심리적 정당화(Kluver 1997, 48)를 위한 상징 전략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정권은 무엇보다 민족주의와 반공주의에 기초한 상징전략을 구사했다. 정권의 민족주의는 1945년 9월부터 제창된 ‘일민주의’였다. 일민주의는 근본적으로 혈통적·종족적 민족주의다(이관후 2002, 51). 민족적 단일성과 국가적 통합을 지향한 일민주의 속에는 체제 안정의 위협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논리가 내장되어 있다. 즉 그것은 계급적 분열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분열과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논리다.²⁾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원리의 의미가 상실된 자리에는 민족적 의지의 구현체인 국가가 들어앉는다.³⁾ 1920-30년대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유기체적 민족관과 사회관이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있었으며(박찬승 2002, 209), 당시 초·

2) “...민족이란 계급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계로 존재할 수 있다...민족이 그 내부에서 계급적으로 분열될 수 있는 것과 같이 계급적으로 분열하지 않는 민족도 존재할 수가 있고 또는 일단 계급적으로 분열된 민족이 무계급적으로 통일될 수도 있다”(양우정의 발언. 서중석 1988, 50에서 재인용). “누구나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정부를 반대하여 국권을 손상키 위해서 노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우리가 다 누구누구라는 것을 지적해놓고 또 그 뒤를 따라서 선동선전하는 사람들은 한쪽에 치워놓고, 정부를 지지하며 통일을 보호하는 남녀들은 모두 한쪽에 모아서 우리끼리 통일을 만들어 놓아가져야 파괴분자들의 위험한 화기를 막을 것이요 우리 전민족의 유일한 통일을 위해서...”(이승만의 발언. 서중석 1988, 67에서 재인용).

3) 이범석은 다음과 같이 선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족자상’ 명령으로 그 피의 결함을 요구하고 ‘국가자상’의 권위로서 그 맘과 힘의 단합을 요구한다”(이범석의 발언. 서중석 1988, 62에서 재인용).

중등학교 차원의 정치 교육이 일민주의 중심의 민족주의적 교육을 지향했고(진유범 2001, 35), 1949년 9월 ‘일민주의 보급회’가 발족되었다는 사실들은 일민주의에 대한 정당성과 지지의 사회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이러한 민족주의 논리를 통해 이승만은 자유당 창당을 정당화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얼룩진 부산정치파동 역시 합리화한다.

한편 이승만 정권의 민족주의 담론은 6·25를 거쳐 반공주의 담론과 결합하면서 한층 더 강화되기에 이른다. 모든 이념은 그 이념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규정되는 ‘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육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Edelman 1988, 67). 혹자는 전쟁을 계기로 통치 이념의 기반이 일민주의에서 반공주의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지만(최장집 1996, 189; 박찬승 2002, 242),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평가는 외형적 관찰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반공주의가 표면적으로는 일민주의와 결합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반공주의는 일민주의가 표방하고 있었던 혈통적·종족적 민족주의의 논리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와 적대감의 형성은 공산주의 이념 그 자체에 근거하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들을 반민족적 세력(적)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쟁의 경험 속에서 민족의 적이 구체적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승만의 담론을 보면 무엇보다 ‘동포로서의 북한 주민과 적으로서의 북한 정권’이라는 이분법이 구축되어 있고 후자는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반민족적 주체로 등장한다.

차후도 당분간 공산 압제 하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우리들의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든 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 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 있으며 결국 성취되

고야 말 것입니다(이승만 1953년 7월 27일, 심지연 2001, 161).

일민주의와 반공주의에 기초한 이승만 정권의 민족주의 담론은 정당성과 도덕성의 치명적 결함을 상징하는 3·15 부정선거에 저항한 4.19 시민세력의 민족주의 담론과 민주주의 담론을 통해 공격 받게 된다. 당시 시위를 주도한 학생세력과 이승만 하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학교수단의 담론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민족적 차원의 의미규정이 보인다.

바로 지금 온 겨레가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비참하고도 하늘 밑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막힌 변을 겪는 우리는, 아직도 억울한 가슴의 상처를 부둥켜안고 엎드려 있어야 한단 말인가. 학도들은 일어났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인 이상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 있다 (전 부산학생 호소문(1960년 3월), 김삼웅 1984, 15).

이번 4·19 참사는 우리 학생운동사상 최대의 비극이요, 이 나라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중대사태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규정(糾正)이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은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마산·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쫓겨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누적된 부패의 부정과 횡포로써 민권을 유린하고 민족적 참극과 국제적 수치를 초래케 한 현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가라(대학교수단 4·25 시국선언문, 김삼웅 1984, 20-21).

이승만 정권의 붕괴 이후 등장한 2공화국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는 그간의 북진통일론과는 다른 평화통일론이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통일의 이슈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담론이 전개된다. 1960년 7·29 총선에서는 한국사회당, 사회대중당, 사회혁신당 등 이른바 ‘혁신계’의 주도로 이러한 통일 민족주의 담론이 급격하게 부상한다. 이들은 남북교류, 협의기구 건설, 남북 자유 총선거 등 통일을 위한 방법들을 구체화하면서 통일 문제의 이슈화를 밀고 나간다(이용원 1999, 212-213). 이러한

움직임은 1960년 11월 18일 ‘민족통일연맹’을 결성하는 등 통일운동을 주도하고자 한 학생세력에 의해 가속화된다. 이들에게서 통일은 모든 이념을 초월해서 실현해야 할 역사적·민족적 당위이자 가치로 나타난다.

하지만 학생·사회 세력들의 통일운동과 민족주의 담론은 5·16 쿠데타에 의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 장면 정권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억압되었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들을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반 형성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정치·사회적 위기를 관리하는 데는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치·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면 정부는 신구파로 나뉘어 정쟁에 몰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쿠데타가 발발한 뒤에도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종적을 감추어버렸다는 사실은 2공화국의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증거 하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군부 정권의 등장은 구직업주의 군부에 대한 신직업주의 군부의 지배(Stepan 1973, 52)와 민간 정치세력에 대한 군부 세력의 장기적 우위를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김호진 1990, 240). 이승만 정권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 붕괴의 직접적 요인은 1978년 후반부터 79년 10월에 걸쳐 발생한 일련의 반정부 저항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1964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의 비민주성, 1969년 삼선개헌, 1972년 유신쿠데타와 이후의 폭력적 통치 등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누적된 결과였다. 64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을 둘러싼 갈등 요인은 근본적으로 회담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정권에 의해 폐쇄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었다는 데 있다. 4·19와 5·16에 의해 중단되었던 국교정상화 회담은 한국의 중앙정보부와 일본 외무부간의 비밀협상에 의해 61년 10월부터 재개된다. 그런데 64년 3월 비밀협상 내용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학생들을 비롯한 반정부 세력들이 이를 굴욕외교로 규정하고 회담 반대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전개한다. 이에 대해 정권은 계엄령(64

년 7월 29일)과 위수령을 발동(8월 29일)하는 등 폭력적 대응으로 일관한다. 군부정권은 69년 삼선개헌을 통해 헌정주의와 의회주의를 다시 유린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1972년 10월의 유신선포를 통해 헌정쿠데타를 감행하기에 이른다. 이승만 정권이 의회에서의 간접 선거로는 대통령 재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하에 1952년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유신쿠데타 역시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난 권력의 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 입후보 제한 규정 철폐,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국회의원 1/3의 대통령 지명 조항, 국정조사권 폐지, 대통령 긴급조치권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신헌법은 글자 그대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것이었다. 1974년 1월부터 발동되기 시작한 긴급조치권을 이용해 정권은 반정부 세력에 대한 탄압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하지만 역으로 그러한 폭력 통치는 정권에 대한 저항을 가속화시킨다. 유신정권에 대한 불만은 1978년 10대 총선에서 신민당에 대한 지지 상승으로 나타나고(32.8%/ 민주공화당 31.7%)(김호진 1990, 401)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은 뉴욕 타임즈와의 회견을 통해 ‘독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김영삼의 의원직 제명(79년 10월 13일), YH 사태(79년 8월 11일)와 부마사태(79년 10월 15일)에 대한 폭력적 대응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유신정권의 말기는 그야말로 폭력의 악순환으로 점철된다. 이는 결국 정권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최고 권력자의 암살(10·26)을 통한 정권 붕괴로 귀결된다.

권력을 정당화하고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이승만의 민족주의 담론이 혈통과 종족 원리에 기초한 일민주의로 표출되고 나아가 반공주의와 결합하는 형태를 띠었다면 박정희의 그것은 그러한 바탕 아래에서 다른 이념적 요소, 예컨대 문화주의(역사와 전통의 강조)(전재호 1998), 국가주의(국가와 개인의 동일성 강조), 발전주의(근대화와 자립경제 강조) 등을 끌어들이면서 한층 더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양상을 보인다. 논

의의 시점으로서 박정희의 민족관을 살펴보자.

단군 성조가 천혜의 이 강토 위에 국기를 닦으신 지 반만년, 연면히 이어져 온 역사와 전통 위에 이제 새 공화국을 바로 세우면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나의 신명을 조국과 민족 앞에 바칠 것을 맹세하면서 겨레가 쌓은 이 성단에 서게 되었습니다...아시아의 동녘에 금수강산이라 불리우는 한반도에, 선조의 거룩한 창국의 뜻을 받아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배달의 겨레가 5천년의 역사를 지켜 온 이 땅이 우리들의 조국입니다. 한 핏줄기 이 민족의 가슴 속에 붉은 피 용솟음치는 분발의 고동과 약진은 결코 멈추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1963년 12월 17일 5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표명된 그의 민족관은 글자 그대로 원초론적·영속론적 민족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일견 이러한 민족 원리에는 주목할만한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단일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공유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정치·사회적 요구와 저항을 억압하면서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이념적 두 기제인 '경제제일주의'와 '반공주의'의 궁극적 기초였다는 점에서 이승만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적극적 이념의 위상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16 군사 혁명위원회가 발표한 '혁명 공약'의 첫째 항과 넷째 항을 보자. "반공을 국시의 제 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김삼웅 1997, 256). 이렇듯 박정희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자립경제와 반공을 주요한 이념적 축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민족 번영과 민족 통일과 같은 민족주의적 가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다가오는 연대야말로 기필코 고도 산업 국가를 이룩하여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고, 번영과 풍요 속에서도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복지 사회를 이룩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까지 축적된 민족의 힘과 슬기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우리 역사상 다시 한번 민족 문화의 개화기를 맞이하는 위대한 연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숙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획기적인 진전을 성취함으로써 유구한 역사 속에 연면히 이어온 민족사의 정통성을 드높이고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향한 인류 역사의 진운에 적극 기여해야 하겠습니다(제9대 대통령 취임사).

반공주의와 민족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수인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민족주의와 강고하게 결합시킴으로써 그 효율을 극대화했다”(이수인 2003, 118). 이승만 정권이 ‘북한 동포와 북한 정권’이라는 이분법에 기초해 후자를 민족의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공을 정당화하고 강화했듯이 박정희 정권 역시 이러한 논리에 기초해 반공주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피력한다. 예컨대 “친애하는 남북동포 여러분!”, “4반세기 동안 붉은 공산주의 사회 속에 젖은 조국의 반부”, “북한 측은…조국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심지연 2001, 301; 305; 307)와 같은 문구들은 위에서 설명한 이분법적 논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북한정권은 민족의 적으로 규정되는데 왜냐하면 민족적 위기를 초래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최대의 ‘민족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대외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과 부당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간첩의 대량 납치와 악랄하고 중상적인 선동과 선전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남한을 교란하고 민족을 분열시켜 침략적 야욕을 달성할 수 있는가하는 흥계에 열중하고 있다(『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13-14. 이수인 2003, 118에서 재인용).

경제성장과 반공 나아가 헌정질서 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사용한 이념인 ‘민족주의’는 64년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시기 이래 반정부세력의 저항 담론의 논리로도 사용된다. 이들의 궁극적 논리는 “조국의 근대화로 가는 첩경이라고 기만하는 반민족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래한다, 김삼웅 1984, 41)는 문구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박정희 정권을 반민족적 세력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그러한 논리는 한일 회담 중에 발표된 아래 성명서들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민족의 5천년 역사를 왜곡되게 하느냐, 정의와 자유의 힘으로 3천만 민족의 운명을 봉건·외압·독재·신식민주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 하는 국가적 초비상시 우리 전국 백만 청년학도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구국비상결의 선언, 김삼웅 1984, 44).

우리는 조국의 비운과 민족의 불행을 초래하는 이 매국 망국적인 약조건의 완전 파기를 위하여 전체 국민의 단결과 필기를 호소하며 역사의 대도와 민족의 정론에 입각하여 민족의 자주 자존과 국가의 영원한 주권과 권익의 옹호를 위해서 투쟁하는 문화전선의 대열에 적극 참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굴욕외교는 민족정기 압살, 김삼웅 1984, 51).

박정희 정권의 반민족적 규정은 저항세력의 민족적 규정과 대쌍관계에 놓인다. 69년 3선 개헌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표출된 문구들과 선언을 보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저항은 “새로운 민족역사의 전개”(유진오 신민당 총재, 김삼웅 1984, 85)를 위한 “민족사적 소명”이며 “우리 겨레의 장래를 위하여 크게 유감된 후일의 기록”(3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위, 김삼웅 1984, 89)을 남길 “반민주적·반민족적 3선 개헌 기도”(해외유학생 3선 개헌 반대 결의문, 김삼웅 1984, 77)의 저지 투쟁인 것이다.

한편, 민족의 부흥과 번영을 위한 민족적 의지의 표출로 정당화된 유신체제는 저항세력에 의해 민족의 좌절을 초래하고, 분단을 강요하는 반민족적 시도로 정의된다.

조국의 광복을 되찾은 지도 올해로 꼭 30년이 됩니다. 해방의 감격이 민족의 분단이란 새로운 비극으로 전환된 이래 30여 성상, 우리 민족은 여전히 민족적 염원인 조국통일도 성취하지 못하고 국민적 여망인 민주주의조차도 이 땅에 토착화시키지 못한 채 적대와 긴장 그리고 분열과 갈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암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지난 72년 7월 4일에 일어났습니다. 남북이 민족문제를 자주 평화통일로 발전시킬 것을 합의했다는 이른바 남북 공동성명이 바로 그것입니다...그러나 이 같은 우리의 모든 기대와 감격은 그 해 10월 17일 이른바 ‘유신’이란 이름으로 무참히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장준하, 『박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김삼웅 1984, 254).

박정희 정권의 위기가 정권 내부의 알력에 의한 암살로 귀결되면서 도래한 이른바 ‘서울의 봄’은 미완의 두 과제인 민주주의의 실현과 민족통일의 구현을 위한 정부 수립의 희망을 도전세력들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은 하나회의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에 의해 다시 한번 좌절을 겪게 된다. 79년 12·12 쿠데타를 통한 군권 장악, 80년 4월 15일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장 취임을 통한 정보권 장악, 80년 5·17 계엄 확대를 통한 행정권 장악, 5·18일 광주 민주화 항쟁의 진압을 통한 저항세력의 물리적·심리적 분쇄로 이어지는 쿠데타가 그것이다. 이렇게 수립된 전두환 정권은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저항과 탄압의 반복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정치 위기를 겪게 되지만 그 위기는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민주화라는 결과를 낳는다.

V. 민주화의 도래와 민족주의 이념의 정치(1981~1987)

전두환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위기를 발생시킨 직접적 동인은 개헌 논의를 중단한다는 ‘4·13’ 대통령 선언(1987)과 그에 대한 대규모의 사회적 저항(6월 항쟁)이었다. 이러한 저항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87년 1월) 조작에 관한 언론의 폭로(동아일보)와 시위 도중 발생한 이한열의 사망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두 사건에 의해 확산되었다. 6월 10일, 18일, 27일 등 3회에 걸쳐 전개된 전국적 시위는 정권세력이 도전세력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하도록 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했고 결국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을 이끌어낸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 역시 물리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대규모 저항에 부딪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권 자체의 붕괴로 나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2·16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정치권력을 안정적으로 재 장악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유래하는가? 몇 가지 다른 요인들 — 군부의 불개입 선언, 미국의 민주화 요구 등(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 44) — 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반정부 세력의 요구가 정권 해체가 아니라 헌법 개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월 24일 저녁 전두환-노태우의 회동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헌법 개정 요구는 정권으로 하여금 권력 재장악의 가능성을 열어둔 ‘수용할 만한’ 선택안이었다(노태우 1999, 214). 이는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경로들(위로부터의 민주화/아래로부터의 민주화)보다 타협에 의한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쉬보르스키의 주장(A. Przeworski 1992)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3대 대통령 선거전에서 불거진 김영삼과 김대중의 경쟁과 그에 따른 지지 세력들의 분열 및 KAL기 추락사건 등은 정권의 계산이 현실로 전환되는 데 결정

적인 기여를 한 요인이었다. 노태우의 대통령 당선으로 귀결된 12·16 선거는 반정부 세력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지만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1948년 건국 이후 한국 정치발전의 핵심적 과제는 헌정주의의 제도화에 있었다”는 평가(김세중 1997, 95)를 통해 인식할 수 있듯이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들의 근본적 문제는 권력의 재생산이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국민국가의 제도적 공간이 되는 헌법을 끊임없이 유린했다는 데 있으며 바로 이 점이 국민적 저항의 근본적 이유였기 때문이다. 6공화국 헌법은 1987년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당들 간의 협상의 결과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기초한 대통령 선거 역시 경쟁 선거였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전적으로 다른 정치적 의미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전두환 군부정권 위기 발생의 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 전두환 정권은 미증유의 물리적 동원과 대규모의 인명 살상 그리고 미국의 암묵적 지원 하에 수립된, 정통성과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결여한 정권이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정치적 결함은 필연적으로 저항운동, 특히 학생운동 노선의 급진화를 초래한다. 군부정권 초기의 강경 대응국면 속에서 등장한 광주 미공보관저 방화투쟁(1980년 10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투쟁(82년 3월) 및 성조기를 태우며 시도한 강원대생들의 반미시위(82년 4월) 등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반미 투쟁의 전개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운동의 동력은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회복을 저항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한 60-70년대와는 달리 공동의 적으로 규정된 군부정권과 미국을 타도하고 민족·민중·민주적 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혁명운동 노선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학생운동의 급진화에 대한 정권의 대응양식은 1983년 겨울부터 시작된 이른바 ‘자유화 조치’를 통해 강경대응에서 유화적 대응양식으로 변모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1985년 2·12 총선에 대비한 장기적 포석이었다. 즉 정권은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함을 총선을 통해 만회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억압적 사회국면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계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등장한다. 즉 해금 정치인들의 참여로 창당한 신민당이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 승리하면서 민한당과 국민당을 제치고 제1야당으로 부상했고 이러한 제도 정치권의 역학관계 변화는 곧 이어 반정부 단체들의 부상과 조직력 강화를 유도한다. 이는 오도넬과 슈미터가 말하는 “시민사회의 부활”을 의미한다(O’Donnell and Schmitter 1986, 49). 이러한 예상 밖의 충격 속에서 정권은 다시 강경국면으로 나아간다. 1985년 8월의 ‘학원안정법’ 파동, 1986년 5월의 인천사태와 9월의 건대 ‘애학투’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및 이후 반정부 급진세력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 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반정부 세력의 저항력이 급격히 약화되는데 1986년 말 신민당의 내분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러나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사건, 4월 개헌 논의 중단 선언, 5월 고문치사사건 폭로 등 일련의 사건들은 도전세력이 정치적 연대를 이루면서 새로운 저항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정권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계기들로 작용한다.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도전세력들의 이러한 일련의 저항들을 약화시키면서 권력의 안정적 행사를 위해 전두환 정권이 구사한 상징 전략은 기존의 정권들과는 상이한 측면을 드러낸다. 즉 기존의 정권들이 민족주의와 반공주의의 결합에 기초한 전략 또는 민족주의, 반공주의, 발전주의의 연계에 기반한 전략을 구사했다면 전두환 정권은 상대적으로 민족주의 담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민주주의 담론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선회한다. 이러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 전두환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지니고 있었던 ‘민족적 퍼스낼리티’를 대체할 어떠한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둘째로는 박정희의 군부쿠데타가 전혀 새로운 현상이었던 반면 전두환의 쿠데타는 전자의 경험을 통해 이미 비교의 준거를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러한 조건이 신군부세력에게 자신들의 쿠데타의 의미가 장기집권의 권위주의 체제를 초래한 1961년의 그것과는 다른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를 안겼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두환 정권이 민족주의 담론보다 민주주의 담론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론할 수 있게 된다. 전두환 정권의 민주주의 담론의 핵심적 요소는 ‘평화적 정권교체’였다.

30여 년간의 우리의 헌정사를 통하여 국민적 비원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나라의 체모에 관련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연중 행사화 시킴으로써 정국을 격동의 수렁에 빠뜨린 주인이기도 했습니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개헌안의 정신이 우리의 체질로 될 때 자신의 손으로 정권을 결정한다는 국민적 자부심이 제고될 것이며 이 때에 비로소 민주주의는 우리의 토양위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개헌공고에 즈음한 대통령 특별담화, 동아연감. 1981, 787).

평화적 정권교체 담론을 통해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군부정권으로 상징되는 장기집권의 정권과는 전혀 다른, 민주적인 정권임을 설득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정권 차원의 체계화된 민족담론의 부재 속에서 민족주의 담론은 저항세력들에 의해 점유된다. 민족의 고난과 저항을 총체적으로 표출하던 과거의 담론 양식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1985년 이후 급진 학생세력(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파, NL) 등에 의해 수사적 언술체계를 넘어 반미 제국주의 지향성을 갖는 변혁의 이념으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이 1980년대 저항세력의 민족주의 담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민통련은 87년의 최대과제를 장기집권음모분쇄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민족사의 기나긴 도정 속에서 보면 단기적 목표에 불과하다.

민족을 갈라놓고 남의 땅을 핵기지로 만든 채 사실상 종주국 행세를 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이 나라가 다시는 외세와 독재자의 손아귀에서 돌아나지 않도록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적 이정표이며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업이다(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1987년 1월), 『6월 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 1997, 15).

이렇듯 반정부 민주화 운동의 궁극적 의미를 민족주의 지평 위에 설정하는 형식은 사실상 60-70년대 민주화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데 80년대에 들어오면 민족주의는 하나의 혁명 담론의 형식과 내용을 띠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최장집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정치적인 지배질서와의 동태적 대쌍관계를 통해 그 성격이 만들어졌고 변화되었던 것이다(최장집 1996, 192). 즉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혁명적 민족주의 담론은 전두환 군부정권의 정치적 성격 속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미제에 대한 적개심과 그 앞잡이 전두환 괴뢰 도당에 대한 분노로 피끓는 애국 청년 학우여! 반미 자주화 반파쇼 투쟁의 대열에 총집결하라! 19세기 말 이래 한반도의 역사는 미·일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였고 이에 대한 민중의 치열한 투쟁의 역사였다. 자본주의의 최후로서의 단계의 제국주의는 총칼을 앞세우고 3세계 민중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자행하였고 일제는 마침내 한반도를 식민지로 강점하였다. 한국 민중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여 영웅적인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나 해방의 감격이 소용돌이치는 시점에서 미제라는 새로운 제국주의 침략의 비극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 민중의 반제 민족해방 투쟁은 미제의 군화발과 총칼에 철저히 탄압되고, 미제는 자신의 정치경제 군사적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괴뢰 정권을 수립하였다...우리는 더 이상 이 치욕적인 반동의 역사에 방관자가 될 수 없다. 우리의 혈관 속에 면면히 흐르는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기상으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여 적에 의한 반동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감격적인 민족 해방의 그날을 쟁취하자(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선언문, 한용 외 1989, 366-367)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해방 투쟁’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혁명적 민족주의 담론은 1986년 5·3 인천사태에서 시작해 10월의 ‘애학투’ 사태를 거쳐 조성되기 시작한 강경 탄압 정국 속에서 급격히 힘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가 결성되고 국본이 민주화 운동의 이념 통합을 시도하면서 이제 도전세력의 담론 지형은 ‘직선제 개헌안’이라는 온건 민주주의의 이슈로 수렴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볼 수 있다.

민주개헌은 어느 개인이나 정파적 이익의 한계를 뛰어넘는 온 국민의 일치된 소망으로 이미 확인되었다. 우리 국민은 85년 2·12 총선을 계기로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화의 길을 얻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서 민주 개헌의 요구를 도도하게 분출시켰던 것이다. 개헌은 단순히 헌법상의 조문개정을 뛰어넘어 유신 이래 빼앗겨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기본권리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선택권을 되찾음으로써 실로 안으로 국민다수의 의사를 실행하고 밖으로 민족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의 수립을 가능케 함을 의미한다. 또한 개헌은 응어리진 국민적 한과 울분을 새로운 단결과 화해,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민주화를 위한 출발점이며 절대명제임을 밝히는 바이다(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운동본부 결성선언문, 『6월 항쟁 10주년 기념자료집』, 1997, 212)(강조는 원문).

VI. 나오는 말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근대정치는 민족적 차원과 민주주의 차원 모두에서 완성되지 못한 근대국가 주위를 선회했다. 이승만 정권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전개된 이른바 탈권위주의 민주화 과정은 민족적 완결

성과 민주주의적 내용성을 갖는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이러한 역사적·정치적 특수성 위에서 전개되었고 이런 점이 다른 나라들의 탈권위주의 민주화 과정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민주화는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념적 분기와 갈등 속에서 전진과 후퇴를 거듭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적 갈등의 지평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민족주의 담론의 정치적 규정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고유한 역사적 기반 위에서 성립한 민족의식과 민족주의는 특정한 세력의 이념이 아니라 모든 세력이 의존하는 정통성과 정당성의 원천적 이념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 부여하는 무게가 엄청났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듯하다. 민주화 과정에서 민족주의는 권위주의 지배세력의 정당성을 위한 이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항세력의 투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이기도 했다. 지배세력의 민족주의가 체제 유지의 도구(지배 이데올로기)였다면 저항세력의 그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반권위주의 투쟁을 이끌어가는 이념적 동력(저항 이데올로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언제나 ‘민족’과 ‘민주’의 이름으로 민주화 투쟁을 이끌어나갔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최장집이 말하고 있듯이 저항세력에게서 민족주의는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무기였다”(최장집 1996, 192).

이 점이 바로 1987년까지 한국 민족주의의 핵심적 측면이라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1987년 이후 강고한 권위주의 세력이 해체된 다음 한국의 민족주의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1987년 이후 한국 정치의 과제가 민주주의의 심화에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민족주의는 정치 민주주의의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문화적 차원의 민주주의 형성을 위한 이념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답일 것이다. 이는 민족주의의 민주적 잠재력을 구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다. 윤해동은 ‘내파하는 민족주의’라는 의미심장한 제목 하에 한국 민족주의의 현재적 위상을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방 후 한국 민족주의가 식민제국주의의 민족주의를 본받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반체제적 민족주의는 지배민족주의의 모습을 싸우면서 닮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애국’과 ‘애족’을 내세우면서 성장한 반체제 민족주의가 또 다시 국가주의로 회귀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보적 민족주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반성적 능력을 가질 수 없다면 민족주의가 가진 비판능력도 상실되었다고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제 한국 근대민족주의는 흔들리는 국민국가의 지위와 아울러 그 공공성의 의미에 대해 스스로 되물어야 할 때이다(윤해동 2003, 189).

이러한 도발적 문제제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공간에서 민족주의가 차지하는 이념적 특성과 정치적 규정력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준다. 이는 연구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본 논문의 향후의 연구과제로 설정되기에 합당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7. 『6월 민주화대투쟁』. 서울: 민중사.
- 김남식. 1987. “조선공산당과 3당 합당”. 박현채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서울: 한길사.
- 김도현. 1980. “이승만 노선의 재검토”.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 김삼웅. 1984. 『민족·민주·민중선언』. 서울: 일월서각.
- _____. 1997. 『사료로 보는 20세 한국사』. 서울: 가람기획.
- 김세중. 1997. “헌정주의 제도화의 평가와 과제”. 최장집·임현진 공편.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 서울: 나남.
- 김학준. 1980.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 김호진. 1990. 『한국정치체제론』. 서울: 박영사.
- 노태구. 2002. 『민족주의와 국제정치』. 서울: 백산서당.
- 노태우. 1999. “회고록 2”. 『월간조선』. 6월호.
- 동아연감. 1981, 1982.
- 동아일보사. 1990.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 박명림. 1996. “분단시대 한국 민족주의의 이해”. 『세계의 문학』. 여름호.
- 박찬승. 2002. “20세기 한국 국가주의의 기원”. 『한국사연구』. 117권.
- 베네딕트 앤더슨 저·윤형숙 역. 2002.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나남.
- 서중석. 1988. “이승만 정권 초기 일민주의와 파시즘”.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서울: 역사비평사.
- _____. 1991. 『한국현대 민족주의운동연구 1』. 서울: 역사비평사.
- 심지연. 1986. 『해방정국 논쟁사 1』. 서울: 한울.
- _____. 2001.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 1948-2001. 자주화·국제화의 관점에서 본 통일방안 연구와 자료』. 서울: 돌베개.
- 아르투어 로젠베르그 저·박호성 역. 1990. 『프랑스 혁명 이후의 유럽 정치사』. 서울: 역사비평사.
- 양동주. 1987. “해방 후 좌익운동과 민주주의민족전선”. 박현채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서울: 한길사.
- 어니스트 겔러 저·이재석 역. 1988.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예하.
- 에르네스트 르낭 저·신행선 역. 2002. 『민족이란 무엇인가』. 서울: 책세상.
- 에릭 홉스봄 저·강명세 역. 2003.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창작과 비평사.
- 6월 항쟁 10주년 사업 범국민추진위원회. 1997. 『6월 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서울: 사계절.
- 윤해동. 2000. “한국 민족주의의 근대성 비판”. 『역사문제연구』. 제 4 호.
- _____. 2003. 『식민지의 회색지대』. 서울: 역사비평사.
- 이기형. 1984. 『몽양 여운형』. 서울: 실천문화사.

- 이수인. 2003. “‘국가동원체제’의 문화적 동원: 민족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박정희 체제의 국가동원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박정희동원체제 연구팀 발표문(2003년 11월 1일).
- 이관후. 2002. “국가형성기의 한국 민족주의.” 서강대학교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
- 이용원. 1999. 『제 2 공화국과 장면』. 서울: 범우사.
-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소나무.
- 임혁백. 1994. 『시장, 국가, 민주주의』. 서울: 나남.
- . 1997. “지연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최장집·임현진 공편.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서울: 나남.
- 임현진·공유식·김병국. 1994. “한국에서의 민족 형성과 국가 건설 - 〈결손국가론〉 서설”. 준봉 구범모 교수 회갑기념논총 편집위원회 편. 『전환기 한국정치학의 새 지평』. 서울: 나남.
- 전재호. 1997.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연구-담론과 정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 . 1998. “동원된 민족주의와 전통문화정책”. 한국정치연구회 편. 『박정희를 넘어서』. 서울: 푸른숲.
- 제1~9대 대통령 취임사. 청와대 역사관 역대 대통령 자료실
(URL : www.president.go.kr/warp/kr/visit/museum/expresident/)
- 진덕규. 2000. 『한국현대정치사 서설』. 서울: 지식산업사.
- 진유범. 2001. “남북한 정치교육 비교연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 최갑수. 1999. “프랑스 혁명과 국민의 탄생”. 한국 서양사학회 편. 『서양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서울: 까치. 1999.
- 최장집. 1996. “한국 민족주의의 특성”.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 한배호. 1993. 『한국의 정치과정과 변화』. 서울: 법문사.
- 한용 외. 1989. 『80년대 한국사회와 학생운동』. 서울: 청년사.
- 칼튼 헤이즈 저·차기벽 역. 1981. 『민족주의: 이념과 역사』. 서울: 한길사.

Ben-Israel, Hedva. 1992. “Nationalism i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5(2).

Edelman, Murray. 1988. *Constructing the Political Spectacle*.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untington, S.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 century. Norman and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Keane, John. 1994. "Nations, nationalism and citizens in Europ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40.
- Kluver, Alan R. 1997. "Political Identity and the National Myth," Alberto González & Dolores V. Tanno, eds. *Politics, Communication and Culture*. Thousand Oaks, London, New Delhi: Sage.
- Motyl, Alexander J. 1992. "The Modernity of nationalism: nations, states and nation-states in the contemporary world."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5(2).
- Norman, Wayne. 1999. "Theorizing Nationalism(normatively): The First steps." Donald Beiner, ed. *Theorizing Nationalis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O'Donnell, G., P. Schmitter, and L. Whitehead, eds.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prospects for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1992. "The games of transition," Scott Mainwaring, G. O'Donnell and J. Samuel Valenzuela., 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Smith, Anthony. 1995. *Nations and Nationalism in a Global Era*.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2000. "Theories of nationalism," Michael Leifer, ed. *Asian Nationalis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tepan, Alfred. 1973. "The new professionalism of internal warfare and military role expansion," A. Stepan ed. *Authoritarian Brazil*.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The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and the Politics of Nationalism(1945~1987)

HA Sangbok

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and nationalism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nationalism in its political process from the Liberation to 1987. This study is fundamentally oriented to the critics of the theoretical perspective which is to investigate the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in point of view of institutional change, that is, realization of democratic procedure(competitive election). In the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I argue, nationalism is different from others, in that it was the political ideology strongly engaged in the action of the dominant forces, and also of the resistive ones. From the regime of Yi Seung-man to that of Chun Do-whan, despite of their apparent difference, Nation and Nationalism were, without exception, founded in ethnic, historical and cultural elements, and strongly engaged in the political conflicts around the democratization.

Key-Words : democratization, nation, nationalism, nation-state